



선조들 모습 그대로...무등산 유람 지난 1574년 제봉 고경명이 남긴 기행문 '유서석록(遊瑞石錄)'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무등산에서 노닐다' 프로그램이 13일 중심사 등 무등산 일대에서 진행됐다. 광주문화재단이 기획한 이날 행사에서 선비 복장을 한 참가자들이 440여년 전 무등산 유람에 나선 선조들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사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특수법인에 문화전당 운영 맡긴다

(아시아문화원)

국제기구화... 亞각국 문화원조사업 수행

예산 확보·조직운영 어려움 지역 반발

문화부 '문화도시 조성 특별법' 개정안 입법 예고

정부가 오는 2015년 개관할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의 운영주체를 특수법인 '아시아문화원' (현 아시아문화개발원)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시아문화원은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 문화 정책개발원(ODA) 사업까지 맡게 돼 아시아 문화 허브(Hub)를 지향하는 문화전당의 역할과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문화전당 운영주체를 정부기관이 아닌 법인으로 하는데 대해 광주 시와 지역 문화단체들이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조직운영의 어려움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아시아문화개발원' (이하 개발원)의 명칭을 '특수법인 아시아문화원'으로 변경해 문화전당 운영을 맡기는 내용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법안의 골자는 문화전당 개관 콘텐츠(전시·공연 등) 구축과 문화콘텐츠 유통업무를 맡고 있는 개발원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 아시아문화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문화전당 운영의 전권을 맡기는 것이다. 아시아문화원장은 전당의 총책임자가 되고 그 임명권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행사한다. 아시아문화원에는 문화부, 광

주 시 공무원과 민간인들이 근무한다. 문화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의 협조를 얻어 300여명으로 추산되는 문화전당 정원을 확보하기 어려운데다 개관준비를 서두르기 위해 법률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법안에는 아시아 문화원이 정부가 추진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까지 맡도록 하고 이를 위해 국제기구 설립, 또는 국제기구 사무국 유치 등을 포함한 '아시아문화원 국제기구화'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문화부는 문화전당의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문화전당은 문화부 장관 소속하에 둔다'는 기존 법률조항을 그대로 유지했다.

정부는 개정법률안 예고기간을 거쳐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아시아문화원은 내년 3월께 출범하게 된다.

그러나 문화전당 운영주체를 정부

기관이 아닌 법인형태로 정하는 것에 대한 반감도 커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기관이 문화전당을 도맡지 않으면 안정적인 공연·전시 콘텐츠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개정 법률안에는 "아시아문화원 또는 관련 전문단체 법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느슨한 조항이 담겨있다.

광주지역에 예술인촌, 지역문화교류재단 등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전당 운영주체는 국가기관으로 출몰해야 하고, 지금 시점에서 전당 운영주체 변경에 대한 어떤 논의도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광주시도 울초 "수익시설이 없는 문화전당을 법인화하면 운영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어려워진다"며 "개관 초기에는 문화부 소속기관으로 운영하고 예산과 사업 등 문화전당이 안정화될 후에 법인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

고속국도 이용률 낮고 국도와 노선 중복

감사원, 무안~광주 등 전국 9곳 조사... 교통량, 예측 대비 절반도 안돼

1조734억원을 들여 지난해 개통된 목포~광양 고속국도를 운행하는 차량이 많지 않아 평일에는 텅 비는 이유가 있었다. 강진~장흥~보성~순천을 잇는 기존의 국도와 이 고속국도의 구간이 똑같아 운전자가 분산됐기 때문이다. 기존의 국도 바로 옆에 충분한 검토 없이 새 고속국도를 뚫어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꼴이다.

목포~광양과 무안~광주 고속국도 등 기존 국도와 구간이 겹치거나 교통량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국내 고속국도의 부적절한 건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13일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가 통보한 기존 국도와 중복된 국내 고속국도는 광주~완도(사업비 8838억원), 전주~광양(" 1조9021억원) 목포~광양, 충주~제천(" 7889억원), 함양~거창(" 2176억원) 등 5곳이다.

영암~강진~해남을 잇는 광주~완도 고속국도는 같은 구간을 연결하는 기존 국도가 있고, 충주~제천과

함양~거창 고속국도 또한 똑같은 구간을 잇는 국도가 있다.

이들 노선 중 전주~광양과 목포~광양은 이미 개통됐지만 다른 구간은 계획 보류나 공사 중이다.

특히 이미 개통된 전주~광양 고속국도의 지난해 실제교통량은 예측교통량의 53%(예측 하루 2만7233대, 실제 1만4460대)에 불과했다. 노선이 중복된 두 개의 국도가 있다 보니 교통량이 적은 셈이다. 목포~광양은 개통 초기여서 이 조사에서는 빠졌다.

다. 이처럼 한국도로공사는 교통량을 과다 추정해 타당성 낮은 고속국도를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7년~2010년 사이 개통한 국내 고속국도의 교통량을 분석해보면, 무안~광주의 실제교통량은 58%(예측 3만4125대, 실제 1만9696대)에 머물렀다. 또 고창~담양 23%, 익산~장수 22%, 대전~당진 52%, 청원~상주~58% 등 조사 대상 9개 고

속국도의 평균 실제교통량은 47%였다.

고속국도 건설의 잦아지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도 엉망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2016년 준공목표로 건설 중인 상주~안동~영덕 노선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B/C가 기준치 1에 못 미치는 0.56~0.86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지만 지난 2008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 노선을 '30대 선도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30대 선도사업으로 선정돼 추진 중인 부산과광주순환도로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B/C가 1.13이었지만 재조사 결과 0.82로 나타났다.

B/C가 1에 못 미친 광주~완도 고속국도는 보류됐지만 비슷한 처지인 영남지역 도로는 공사에 들어가는 등 정부의 B/C 적용 기준도 오락가락하고 있는 셈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北 "당국회담 무산은 남측 책임"

정부 "실무접촉 왜곡 공개 유감"

북한이 13일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된 책임을 남측에 돌리면서 "당국회담에 미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가 "북한이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반박, 당분간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의 대남기구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북남당국 회담이 괴뢰패당의 오만무례한 방해와 고의적인 파탄책

동으로 시작도 못해보고 무산되고 말았다"며 "우리는 당국회담에 털끝만한 미련도 가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평통은 이어 "(남측은) 이번 사태가 북남관계에 미칠 엄청난 후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반 담화는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된 이후 북한의 첫 공식 반응이다. 조평통은 남측이 통일부 장관을 회담에 내보낼 것을 약속했음에도 회담 직전에 수석대표의 급을 낮췄다며 이는 "북남 대화역사에서 본적이 없는 해괴한 망동으로서 무례무도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한이 사실을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북한이 수석대표 급(級) 문제를 이유로 남북당국회담을 무산시키고 오

늘 담화를 통해 실무접촉 과정을 일방적으로 왜곡해 공개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도 관문점 연락관의 전화를 받지 않아 연락체널이 이를 재가동되지 못했다.

다만 남북이 대화의 여지는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 대립 국면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이 성의를 갖고 책임있게 남북 당국 대화에 호응해 오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연합뉴스

2013학년도 후기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야간) 모집

- 모집분야: 행정학과(공공행정전공, 사회행정전공)
- 모집인원: 00명 (광주반, 여수반, 남악반)
- 전형방법: 면접고사
- 원서접수: 2013. 6.17(월) ~ 7.2(화)
- 문의: TEL 062-530-5196 FAX 062-530-2266
- 홈페이지: http://cnugpa.kr

함평해보농공단지

1. 농공단지 개요

- 위치: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용산리 579번지 일원
- 사업기간: 2011 ~ 2013년
- 조성 면적: 245,430㎡ (산업시설 173,429 지원시설 1,788, 공공용지 70,213)
- 준공 예정: 2013. 9월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시행자: 함평군수

2. 분양대상

구분	단지구획	분양면적(㎡)	분양가격(예정가격)	비고
산업시설 용지	35블럭	173,429	81,675원 / ㎡	• 건폐율: 70% 이하 • 용적률: 200% 이하 • 층수: 4층 이하

* 분양가격(단가)은 사업기간 동안의 자본비용을 반영한 추정 원가로서 사업 준공 후 실제 투입된 총사업비 및 확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정산
* 분양면적은 확정측량결과에 의거 변동이 있을 수 있음

3. 입주대상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에 한함

연번	업종	산업분류 번호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173,429	100.0	
1	식품품 제조업	C10	9,724	5.6	
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C22	30,389	17.5	
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C23	29,358	16.9	
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도금업 제외)	C25	28,268	16.3	
5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59,947	34.6	
6	기타제품 제조업	C33	15,743	9.1	

입지여건

- 도로: 국도 22, 24호선 이용으로 수도권 물류 수송 용이, 광주 평동산단까지 15분
- 항공: 광주공항까지 25분 소요
- 철도: 송정역까지 20분 소요
- 하천: 목포역까지 40분 소요
- 지가: 광주광역시 배후지역 중 지가가 가장 저렴

분양문의 함평에코플렉스: 1577-6461 http://hampyeongheabo.com
함평군청 전략경영과: 061-320-3294

사업시행자 **함평군** HAMPYEONG COUNTY 분양사 **함평에코플렉스(주)** HAMPYEONG ECO COMPLEX INC. 시공사 **(주)금강건설**